

---

# 「어음법 일부개정법률안」에 대한 의견

(의안번호 1024)

---

2012. 9.



사단  
법인 **한국중견기업연합회**  
KOREA MEDIUM INDUSTRIES ASSOCIATION

# 「어음법 일부개정법률안(의안번호 1024)」에 대한 의견

## [의견]

- 어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기업 범위를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상 대기업이 아닌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(이하 공정거래법)」상 ‘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’로 명확히 해 줄 것을 요청
- 2011년 「산업발전법」이 개정되면서 중견기업\* 개념이 도입됐지만 타 법령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 중견기업은 대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으로 분류, 규제를 받고 있어 피해가 증가

### 중견기업 정의

중견기업 정의는 산업발전법(제10조의 2항), 동법시행령(제3조의 2항)에 의함.

- ①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
-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

※ 자세한 사항은 별첨자료 참고

- 어음법 개정안은 중견기업을 대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어 중견기업도 규제를 받게 되어 금융비용이 증가, 자금난을 심화할 수 있음
- 이에 따라 중견기업을 대기업처럼 규제하는 것은 중견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어렵게 할 것
- 중견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대기업 정의를 「공정거래법」상 ‘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’로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

「어음법 일부개정법률안」 의견

현행	개정안	의견
<신설>	제34조 ③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대기업이 일람출급* 환어음의 발행인인 경우에는 제2항 전단에 따른 일정한 기일이 30일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.	제34조 ③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일람출급 환어음의 발행인인 경우에는 제2항 전단에 따른 일정한 기일이 30일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.

\* 일람출급: 어음의 만기의 결제방식의 일종으로 만기의 연월일을 지정하지 않고 수취인 기타 어음의 소지인이 지급의무자에게 어음을 제시한 날이 만기가 되어 지급을 행하는 방식임. 즉, 만기에 대해 기재가 없는 어음을 말함.

## [사유]

### 1. 법률 간 충돌: 기업규모에 따른 정의 불일치

□ 어음법 개정안은 규모에 따른 기업분류를 「산업발전법」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법제간 충돌이 발생하고 있음

○ 「산업발전법」 제10조의 2는 기업을 규모에 따라 중소기업, 중견기업, 대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음

- ‘산업발전법’상 중견기업의 범위는 ‘중소기업기본법’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니고, 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’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

- 따라서 산업발전법상 기업은 규모에 따라 중소기업, 중견기업, 대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음

○ 어음법 개정안은 대기업을 「대·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(이하 상생법)」 제2조에 따른 대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어, 대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정의됨

- 이에 따라 어음법 개정안과 산업발전법은 대기업 정의를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법률 간 충돌이 발생

[표 1] 산업발전법과 상생법의 기업정의 비교

산업발전법	상생법
<p>제10조의 2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(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은 제외하며, 이하 이 조에서 <b>“중견기업”</b>이라 한다)으로서 고용안정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혁신 역량과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에 대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원 대상 중견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항목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 <p>1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2.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</p>	<p>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중소기업”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. 2. “대기업”이란 <b>중소기업이 아닌 기업</b>을 말한다.</p>

## 2.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피해 증가할 것

- ☐ 어음법 개정의 목적은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함
- ☐ 어음법 개정안은 대기업을 「상생법」으로 정의하고 있어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들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피해를 입게 될 것
- 어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중견기업은 대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예상
- 산업발전법상 중견기업 수는 총 1,291개에 이르고 있으며, 중견기업 중 약 86%가 매출액 5천억원 미만임

[표 2] 매출액별 중견기업 현황(2010년말 기준)

	1천억 미만	1천억~ 3천억 미만	3천억~ 5천억 미만	5천억~ 1조 미만	1조 이상	총계
기업 수	605(46.9%)	351(27.2%)	154(11.9%)	104(8.1%)	77(6.0%)	1,291

※ 자료: 지식경제부

- 이러한 중견기업은 어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피해를 입게 될 것임

### 3. 금융비용 부담 증가로 현금흐름을 악화시켜 성장을 저해할 것

- 현행 하도급법상 중견기업은 원사업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하는 반면, 수급사업자에서 제외되어 하도급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
- 현행 하도급법 제2조 ③항은 수급사업자 범위를 중소기업자로 제한하고 있으며, 수급사업자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

[표 3] 하도급법상 원사업자·수급사업자 및 대금지급 규정

조항	내용
제2조 ②항 원사업자	원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 1. <b>중소기업자</b> [중소기업법 제2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하며,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] <b>가 아닌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자</b> 2.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보다 많은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자
제2조 ③항 수급사업자	1. 원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(하도급법 제2조 2항)
제13조 ①항	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
- 중견기업이 원사업자로서 수급사업자인 중소기업에 하도급 대금을

지불할 경우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반면, 수급사업자로서 대금을 지급받게 될 경우 60일 이상 소요

- 따라서 대부분의 중견기업은 “거래대금을 빨리 주고 늦게 받는” 상황에 처해 있어 금융비용이 상승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(사례 참조)

### 〈P사 사례〉

- 주요 원사업자 : 현대자동차, 기아자동차, 현대모비스, 한국 GM, 쌍용자동차, 르노삼성, 대우버스 등
  - 원사업자 중 상당수가 외담채와 어음(120일)으로 결제하고 있으며, 현금 결제의 경우에도 현대와 기아(15~30일 이내)를 제외한 대부분 업체들은 90~120일
  - 재하도급시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의 결제기준 준수
- <금융비용산정>
- 할인이자율 (이자율) : 6.8% / 1년
  - 하도급 대금관련 금액: 연 2,133억원(2011년 기준)
  - 금융부담액 :
    - 1) 현금 및 수표기준 (기회비용 : 90일 기준)  
$$[640\text{억}(\text{하도급매출}) + 64\text{억}(\text{부가세 } 10\%)] \times 6.8\% / 365\text{일} \times (90-60)\text{일}$$
  
**= 3.9억 (60일기준 대비 기회손실)**
    - 2) 어음기준 (120일 기준)  
$$[277\text{억}(\text{하도급매출}) + 28\text{억}(\text{부가세 } 10\%)] \times 6.8\% / 365\text{일} \times (120-60)\text{일}$$
  
**= 3.4억 (60일 기준대비 금융비용)**
  - 하도급 대금지급기일 60일 기준과 비교할 때 약 **7.3억** 금융비용 발생

☐ 여기에 어음법 개정안 개정을 통해 만기일을 30일로 규제하는 것은 중견기업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켜 중견기업의 현금흐름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

☐ 이러한 중견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어음법을 개정할 경우 중

견기업의 금융비용은 더욱 증가하고 중견기업의 자금난을 가중시켜 경영난에 직면하게 될 것

- 이러한 자금난 가중은 중견기업의 경영상황을 악화시키며, 나아가 투자를 어렵게 하고 중견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어렵게 할 것

## [개선방안]

- 「어음법 일부개정법률안」에 대해 반대하며, 대기업 범위를 「공정거래법」상 ‘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’로 명확히 해 줄 것을 요청

어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

현행	개정안	의견
<신설>	제34조 ③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대기업이 일람출급* 환어음의 발행인인 경우에는 제2항 전단에 따른 일정한 기일이 30일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.	제34조 ③ 「 <u>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</u> 」 제14조 제1항에 따른 <u>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</u> 가 일람출급 환어음의 발행인인 경우에는 제2항 전단에 따른 일정한 기일이 30일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.

\* 일람출급: 어음의 만기의 결제방식의 일종으로 만기의 연월일을 지정하지 않고 수취인 기타 어음의 소지인이 지급의무자에게 어음을 제시한 날이 만기가 되어 지급을 행하는 방식임. 즉, 만기에 대해 기재가 없는 어음을 말함.

## [별첨] 중견기업의 범위

- 중견기업 범위는 규모기준, 상한기준, 독립성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, 아래 조건 중 어느 하나만 해당되어도 중견기업으로 분류

기 준	해당업종	적용시기
상시 근로자수 300명 이상이고 자본금 80억 원 초과	제조업	다음 연도부터 3년간 유예기간을 부여
상시 근로자수 300명 이상이고 자본금 30억 원 초과	광업, 건설업, 운수업	
상시 근로자수 300명 이상이고 매출액 300억 원 초과	출판, 영상,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
상시 근로자수 200명 이상이고 매출액 200억 원 초과	농업, 임업 및 어업 전기, 가스, 증기 및 수도사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산업	
상시 근로자수 100명 이상이고 매출액 100억 원 초과	하수처리, 폐기물 처리 및 환경복원업 교육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	
상시 근로자수 50명 이상이고 매출액 50억 원 초과	부동산업 및 임대업	
상시 근로자수 1,000명 이상	모든 업종	해당즉시
자산총액 5,000억 원 이상	모든 업종	해당즉시
자기자본 1,000억 원 이상	모든 업종	해당즉시
3년간 평균 매출액 1,500억 원 이상	모든 업종	해당즉시
자산총액 5,000억 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 주식 총수의 30%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인 기업	모든 업종	해당즉시
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인 경우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상시 근로자 수, 매출액 등을 합산하여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	모든 업종	해당즉시

※ 단,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제외